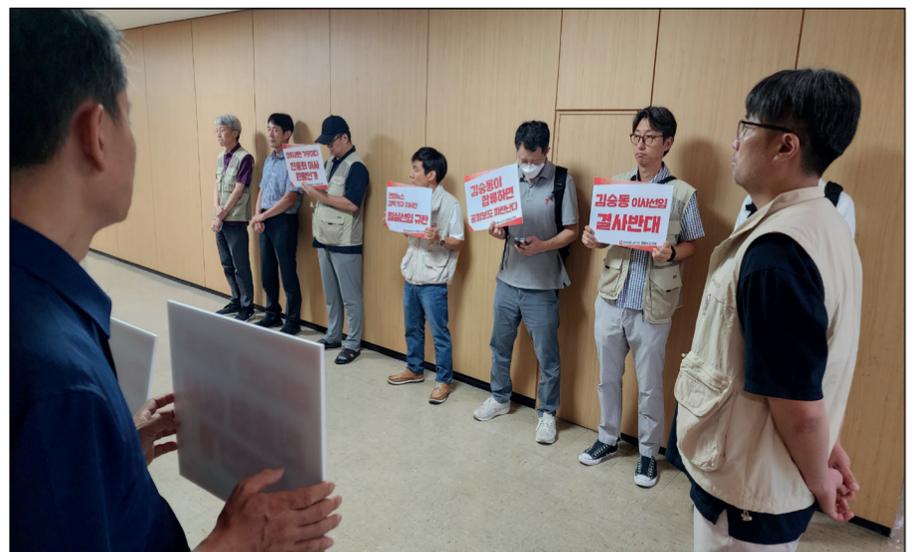




## "사장선임 공정 절차 확립하라" ...노조, 진흥회사 피켓시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1층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 사무실 앞에서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 도입 등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날 진흥회에서는 7기 이사진의 첫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시위에는 연합뉴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언론노조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시위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뉴스통신 진흥회 이사 밀실선임 규탄한다', '연합뉴스 사장선임 공정 절차 확립하라', '구독료 삭감 조롱하던 김승동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지부의 고강도 압박 속에 이사진의 첫 출근길 표정은 위축된 기색이 역력했다.

진흥회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지분율 31%)다. 연합뉴스의 경영을 감독하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공영언론 MBC가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 감독을 받는 방식과 구조가 유사하다.

문제는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사 후보를 선정했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새롭게 선출된 이사진 가운데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이사는 거의 없다.

특히 국민의힘 추천으로 이사진에 합류한 김승동씨는 연합뉴스가 담당하는 공적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연합뉴스 구독료 삭감을 주장하고, 연합뉴스의 최대 자산인 연합뉴스TV 운영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적도 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을 규탄하는 연합뉴스지부를 피해 비상엘리베이터를 통해 몸을 움츠린 채 진흥회 사무실에 들어가며 떳떳하지 못한 스스로를 인정했다.

앞서 8월 22~27일 연합뉴스지부가 진행한 조합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과반(51.9%)은 진흥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위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등 공정한 공모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34.4%)는 의견,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12.3%)는 의견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경영진에게는 구독료 복원(47.3%), 경영 정상화(35.5%), 공정보도 확립(14.1%)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연합뉴스지부는 앞으로도 진흥회가 사추위를 구성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연합뉴스를 살릴 수 있는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7기 뉴스통신진흥회 첫 임시이사회...김영만 신임 이사장 선출

지난달 26일 임기를 시작한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 7기 이사진이 나흘 뒤인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영만 이사(전 서울신문 사장)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출방식을 그간 해오던 추대형식이 아닌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사장이 뽑히며 연합뉴스의 새 경영진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 경영진 선출은 통상 새로운 진흥회 구성 뒤 진흥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앞서 6기 진흥회는 올해 7월 15일에 임기가 끝났으며 7기 진흥회는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며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진흥회 이사진은 정부(2인), 국회(3인), 신문협회(1인), 방송협회(1인) 등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이사진은 9월 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으로 임명된다. 이사진은 9일 이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사장 공모 절차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7기 이사진은 김영만 이사장을 비롯해 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이사, 김환주 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 엄주용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황호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등이다.

# 성기홍 3년, 지지율 2%·부정평가 97%

연합뉴스 성기홍 사장과 정천기·김현준·박상현 상무가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방위 압박에도 기어이 임기 3년을 채운 것 치고는 허탈한 결과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경영 실적은 물론 공정보도 수호나 공적기능 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현 경영진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경영진에게 경영 참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퇴직금 반납을 요구했다.

## ◇ 최악의 경영진...이런 평가 알고는 있는지

노조규약 제76~79조에 따라 8월22~27일 노조 홈페이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진 임기말 평가(응답률 41.2%)에서 응답자의 96.8%는 성기홍 경영진의 경영을 부정적(잘못한 편 28.1%·매우 잘못 68.8%)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2.3%뿐이었다. 지지율이 2.3%인 셈이다. 긍정적 답변 중에도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모른다는 응답은 0.9%였다.

경영을 잘못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62.3%)가 '경영실적 악화'를 꼽았다. 근로 조건 악화(14.5%)와 불공정 인사와 상벌(7.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조직문화 악화'와 '공적기능 약화'가 각각 7.0%를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이라는 주관식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연합 구성원의 분노를 가장 키운 요인은 구독료 관련 대응이었다. 연합뉴스가 정부의 공적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 정부 구독료는 성 사장이 취임한 이후 약 280억 원 삭감됐다.

성 사장이 구독료 삭감에 적절히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97.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긍정적 답변은 1건도 없었다. 응답자들의 주관식 답변에는 "뻔히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상당수였다.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 강탈 시도에 대해서도 79.5%는 경영진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5.9%에 그쳤다. 그 후속조치 역시 89.5%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기홍 경영진 취임 후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0%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은 56.0%, 보통이라는 응답이 38.1%였다.

조직문화 개선 역시 75.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인사가 공정했느냐는 물음에도 68.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 응답자는 '경영진에게 하고 싶은 말' 문항에 "최악의 무능한 경영진이였음에도 구성원의 이런 평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썼다.

## ◇ 3년동안 뭘 했는지...다시 보지 말자

성기홍 경영진은 2021년 9월 큰 기대와 함께 출항했다. 취임 직후 당시 연합뉴스의 목을 옥죄던 '포털 퇴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자 기대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그때까지였다.

성기홍 경영진은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 강탈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더 키웠다. 정부의 구독료 삭감에도 무대응했다. 원칙 없는 인사·상벌로 조직문화가 후퇴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가 터져나왔다. 무능한 경영진이 회사를 좀먹는 상황이 계속됐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작년 11월 편집총국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성기홍 체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조도 그 즉시 성 사장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 성기홍 경영진

### 임기말 평가

참여 221명, 참여율 41.2%



### 성기홍 경영진 임기 3년에 대한 평가

부정 96.8%

긍정 2.3%

### 구독료 삭감 대응

부정 97.3%

긍정 0%

### 연합뉴스TV 강탈사태 대응

부정 79.5%

긍정 5.9%

### 연합뉴스TV 강탈사태 후속조치

부정 89.5%

긍정 1.4%

### 공정보도 수호·공적기능 수행

부정 56.0%

보통 38.1%

긍정 6.0%

성 사장은 작년말 구독료 사태와 관련해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사장직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며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9개월이 흘러 사실상 임기 종료를 코앞에 뒀다.

노조는 8월29일 성명에서 "최악의 경영으로 모든 연합뉴스 구성원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아무 성과도 없이 배수제로 누적된 퇴직금을 어려운 회사 재정에 반납해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경영진의 답변은 없다. 연합뉴스의 '홍보담당자'는 미디어오늘의 관련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차기 경영진에게 바란다...

연합뉴스 구성원은 차기 경영진에게 '공정보도와 공적기능을 회복해 회사를 살려내라'고 요구했다. 8월22~27일에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자율 답변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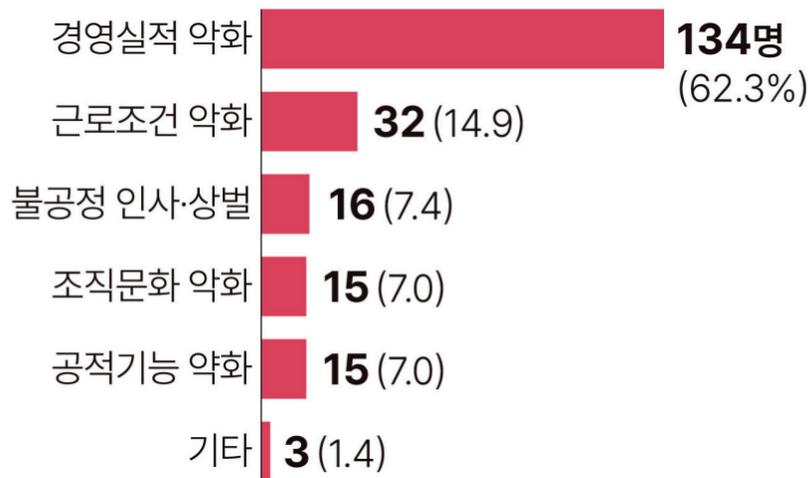
답변 중에는 공정보도 회복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구독료 복원 못할 수 있다.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단, 사장이 바뀐 ○○○(언론사)처럼 이상한 짓하진 말라. 공정보도, 정치적 중립이 연합뉴스의 시작과 끝"이라

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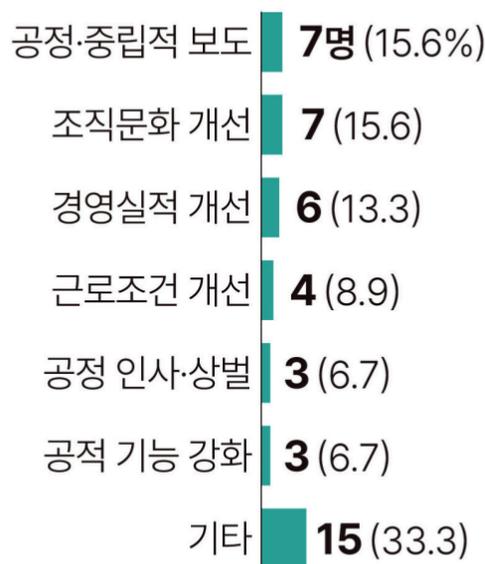
다른 응답자는 "윤석열 정권의 오더를 받고서 연합뉴스를 경영할 생각이라면 오산"이라며 "모든 사원이 눈에 불을 켜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과 직접 담판을 짓든지 할 각오로 돌입하라"라며 "적당히 3년

성기홍 경영진의 '잘못한 점' 참여 215명



성기홍 경영진의 '잘한 점' 참여 45명



조직문화 개선



공정·투명한 인사



성기홍·직장내 괴롭힘 대처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조직문화

직장갑질 전력이 명백한 인물이 고위간부에 중용돼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급간부들은 보복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 부장 기용으로 조직에 성희롱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우 안 좋은 신호를 보냄

인사 실패. 편집국 보직부장 인사에 완전히 실패.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에 젖은 부장들이 조직문화를 망가뜨렸다.

성기홍 경영진의 '잘못한 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음. 공정보도, 조직기강, 경영실적 등 모두 낙제점. 창사 이래 최악의 사장으로 기록될 듯.

경영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도 못했으며 조직문화도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는 점점 늙고 활기가 없어졌다.

정권 눈치보기 보도의 일상화. 특히 정치부 기사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제대로 된 비판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 정권으로서는 연합뉴스가 우스운 집단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인사도 엉망이었다. 특히 마지막에 부장 인사를 안하고 질질 끌고 온 것은 패착 중의 패착이다.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인성이 나쁘고 능력도 없는 편집국 보직부장들이 조직문화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 피로감과 조직 불신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사표를 던지고 나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구독료 삭감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어떤 대응을 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삭감 이후 전략도 대부분 사원들의 노동조건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대응밖에 없었음. 구독료 삭감 대응 최전선에 있는 경영진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음. 사기업이라면 이 정도 경영 실적 악화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음.

성기홍 경영진의 '잘한 점'

경영진이 무능하지만, 구독료 삭감은 경영진의 능력과 상관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

정권이 바뀌어도 경영진 임기를 채운다는 선례를 남겼다

# "공정보도·공적기능 회복하라"

☞ 2면에 이어

채우고 인사로 장난질 치다 고액연봉이나 받고 나갈 생각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설문 참여자는 "연합뉴스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외국어서비스 특파원망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 보장은 물론 경영안정과 공적기능에 대한 투자 확대가 꼭 필

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런 점을 기억하고 경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독료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응답자는 "구독료 복원을 지상최대 과제로 삼으라"고 요구했고, 다른 응답자는 "구독료를 복원하고, 사원의 긍지를 끌어올리라"고 말했다.

# 일방적 '일비' 폐지, 해외 출장자 근로 여건 악화

성기홍 경영진의 일방적인 '일비' 폐지와 법인카드 도입으로 인해 출장자들의 근로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비 폐지는 구독료 대폭 삭감에 따른 회사의 무차별적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탁상행정'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말, 회사는 해외 출장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던 일비를 폐지하고 법인카드를 도입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던 숙박비와 일당을 단일화해, 일반 사원들의 출장비를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비는 과중한 업무에 내몰린 출장자들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보상으로 여겨져 왔다. 매일 12시간 넘게 일해도 8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그림자 노동'에 대한 나름의 보상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일비를 폐지하고, 대신에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법인카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합은 사측의 해외 출장비 조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출장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올해 초 일비 폐지와 법인카드 도입을 골자로 한 '해외 출장비 지급 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을 강행했다. 조합의 원상 복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단협 후 몇 달 동안, 조합은 출장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6월 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일비 복구가 어렵다면,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행사에서만이라도 일일 최대 12시간 근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안은 다름 아닌 사측이 임단협 교섭 중 제안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성기홍 사장은 이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며 노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계속된 조합의 개선 요구에 사측은 주요 해외 출장의 경우 일일 8시간 대신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상금' 지급도 현행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10시간 '간주근로'는 파리올림픽 출장자들에게도 적용됐다.

법인카드 도입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났다.

사측은 출장자들에게 법인카드 영수증 취합, 제출과 사용 내역을 대사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한 달 가까운 출장 동안 챙겨야 할 영수증 수는 상당했다. 게다가 자세한 내역까지 출장 후 보고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조합은 불합리한 영수증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은 사용 내역을 일괄 확보해 영수증



▲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을 취재한 출장자가 단 며칠만에 현지에서 모은 출장용 법인카드 영수증. 출장자들은 약 한 달에 이르는 출장 기간에 끼니마다 사용한 법인카드의 영수증을 거의 모두 챙겼다고 한다. 회사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출장 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기에 영수증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다.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추후에 입력하는 일은 도무지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취합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으나, 대사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여전히 출장자들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해외 출장비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다. 구독료 삭감 이후 사측의 전방위적인 비용 절감 노력은 연합뉴스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루어져, 실익보다는 콘텐츠 질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성기홍 경영진은 임기 말 경영 평가에서 부정 평가율이 96.8%에 달해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진'으로 기록됐다. 구독료 삭감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한 조합원 비율은 97%를 넘는다. 이는 구독료 삭감 대응뿐 아니라, 이후의 비용 절감 조치에서도 드러난 경영진의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다.

조합은 앞으로도 출장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측의 일방적 근로 조건 변경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 '최대 6개월 원칙' 총국장 대행 8개월차...단협 정면 위반

성기홍 사장이 편집총국장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1월 29일 보임된 옥철 편집총국장 직무대행은 이번달에 부임 8개월차에 돌입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14조는 편집총국장 유고시 대행 기간에 대해 "편집총국장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하는 기간을 포함해 총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진이 편집총국장을 정식으로 선출하지 않고 기자들의 동의 없이 편집총국장 '대행'만 내세우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정보도 안전장치다. 성 사장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특히 강의영 전 편집총국장이 기자직 사원의 불신임 투표로 물러난 11월 17일부터 따지면 편집총국장직 공백 사태는 거의 10개월에 이른다.

편집국 리더십이 제대로 구색을 갖추지 못한 사이 연합뉴스의 공정보도는 당연히 후퇴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편집국의 지시가 통일되지 못하고 혼란스럽다는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편집총국장은 기자 모두가 공유하는 편집권을 대표하는 편집인이다. 2012년 103일간의 고통스러운 파업 끝에 마련한 제도다. 편집국을 경영진의 영향

력에서 분리해 공정보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구성원 전체의 의지가 담겨 있다. 편집총국장은 기자직 사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된다.

사실 지지율 2%짜리 성기홍 경영진이 어떤 인사를 총국장 후보로 내세워도 기자직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다. 작년 11월 강의영 편집총국장이 불신임 받은 것도 상당부분 성기홍 경영진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반영됐으리라는 데에는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경영진이 단협을 위반하고 노조를 무시해도 되는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노조는 편집총국장 직무대행이 단협을 위반하는 상황인 만큼 노사 총국장 직무대행이 편집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편집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성기홍 사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희롱 및 괴롭힘 대책 특별위원회'(특위)의 파행 운영도 방치하고 있다. 노사가 4명씩 참여하는 특위의 노조측 위원은 모두 사퇴한 상태다. 당시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모 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일사부재리'라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주고 재심마저 거부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후 특위는 사측 위원들만으로 구성되었다.